

전남도 '4차 긴급 민생대책' 추진... 414억원 투입

난방비, 농어업 전기·유류지원을 올해까지 4차례 총 2532억 지원 김 지사 "대중교통 국고보조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5일 '4차 긴급 민생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전남도청에서 긴급 민생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위기, 연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한 414억원 규모의 '4차 긴급 민생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긴급 민생대책은 지난해 3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여파 최소화를 위해 시작됐다.

지난해 3월 1차 종합 물가안정 대책(668억원), 7월 2차 물가 민생안정(568억원), 12월 경제위기·가뭄대책(882억원) 등 3차례 지원에도 여전히 경제위기와 연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민생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4차 긴급 민생대책까지 포함하면 총 2532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먼저 전남도는 한파로 급등한 난방비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홀로 사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5일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경제위기와 연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민생 지원을 위해 414억원 규모의 '긴급 민생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어르신에게 가구당 20만원씩 70억원을 긴급 지원해 에너지위기에 취약한 도민 부담을 덜어준다.

천연가스·경유 가격 폭등에 따른 버스 노선휴업, 감회운행 등으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업계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버스업계에 연료비 증가분의 30%인 93억원을 지원한다.

또 섬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교통여건을 보장하고, 연안여객선사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연료비

증가분의 25%인 14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수출 물류비 폭등으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증가와 수출 공급망 약화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해 수출액 2만 달러 당 수출직불금 100만원을 책정해 총 10억원

을 지원한다.

농사용 전기요금과 기름값, 난방비 인상 등으로 경영상황이 어려운 농어업인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지원했던 '농사용 전기요금'은 올해 2월말까지 2개월 연장해 인상액의 50%인 87억원을 지원한다.

농어업인 기름값·난방비 인상액 지원은 138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올해 2월말까지 연장 지원하고, 정부차원의 추가대책도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전남이 전국을 선도하는 지원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추가 지원이 필요하므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국가보조 논란과 관련해서 "수도권 지원도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는데다 지하철도 없는 지방의 농어촌 대중교통은 적자가 심각해 폐지 노선이 발생하는 등 지원이 훨씬 더 절실하다"며 "농어촌버스와 연안여객선 공용화 등 농어촌 교통복지를 국가적 차원에서 수도권보다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민주 광주시당 '강진' 튀르키예·시리아 지원

텐트 70개·성금 모금 등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대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해 성금모금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텐트를 보내고 성금 모금 등 지원 활동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당은 텐트 제조업체 '아누(ANUK)'의 지원을 받아 1억5000만원 상당의 면 텐트 70개를 튀르키예 현지에 보내 거주

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진 피해 지역에 거주 시설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시당은 이날부터 21일까지 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을 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지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성금 모금은 공식적인 기부 절차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성금 기부 방법은 민주당 시당 누리집 (<https://gwangju.theminjoo.kr/>)을 참고하면 된다.

이병훈 시당 위원장은 "지난 6일 발생한 강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께 위로를 표한다"며 "광주시민들의 마음이 두 나라 국민들에게 닿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광주시, 1대당 700만원 지원

광주시가 어린이 건강보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5억4000만원을 투입해 77대의 어린이통학차량의 전환을 지원한다. 경유차에서 LPG차로 교체하는 경우 1대당 7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중형 승용·승합(9~15인승 이하) LPG어린이통학차량 신차를 구매하는 차량소유자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16일 공고 때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해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 또는 광주시 대기보전과에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상지 기자

'1인 가구 34.5%' 광주시, 맞춤형 지원 나선다

안심·돌봄·서로이음 등 3대 이음

광주시가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서로 이어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한다.

광주시는 1인 가구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 1인 가구가 건강한 사회공동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3대 이음정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 1인 가구는 2021년 기준 21만 2385가구로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 비율은 2018년 30.2%에서 2019년 31.1%, 2020년 32.4%, 2021년 34.5%로 3년새 4.3%포인트 급증했다. 이는 전국 평균 1인 가구 비율 33.4%보다 높다. 1인 가구 비율은 서울 36.8%, 부산 34.0%, 대구 32.7%, 인천 30.0%, 대전 37.6%, 울산 29.5% 등이다.

전남도·금융권 '중기 버팀목 특별자금' 지원... 전국 최초

농협·광주銀·신용보증기금 협약 최대 3억 한도... 4% 이자 적용

전남도가 금융권과 협력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지원에 나섰다.

전남도는 1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하고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금리 속에서 자금 부담을 겪는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금융권이 손을 맞잡은 전국 최초의 선도적 금융협력모델이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재현 NH농협은행 전남본부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김충배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가

광주시는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1인 가구의 성별·연령·소득격차 등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원 체감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3대 이음정책을 내놨다.

3대 이음정책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관계망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안심이음 △고립감 해소와 건강증진을 위한 돌봄이음 △사회적관계 강화 및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서로이음 등이다.

3대 이음정책의 실현을 위한 14개 세부 과제도 제시했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 등 안심이음 4개 과제, 모바일 안심돌봄 서

비스 등 돌봄이음 6개 과제,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등 서로이음 4개 과제다.

광주시는 특히 1인 가구의 지원 체감도를 높이고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1인 가구 지원 특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신규 사업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5개 자치구 또는 자치구+복지시설·기관 연합체로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3월 말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임영희광주시여성가족과장은 "단기적으로는 1인 가구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며, 중장기적으로는 1인 가구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망 형성으로 다양한 가족도시의 공동체가 조성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1인 가구 특성화 사업으로 1인 가구 지원 정책 체감도가 상승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지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정보 및 QnA

Q. 후보자가 자신의 소문에 대한 해명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전송할 수 있는지?

A.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의 사실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위반됩니다.

허위사실 공표

- ▶주체 : 누구든지
- ▶기간 : 상시
- ▶주관적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전남선거관리위원회 * 全南日報 <<85719D>>
▶ 전남선관위에서 12월에 걸쳐 제공하는 기획연재 보도입니다.